보도자료
국감중간평가
2018.10.22. (45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기간중, 국회내 공동사무실 겸 화상 모니터실 --- 국회본관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간사단체 법률소비자연맹

능멸당한 국회와 국정감사, 법치민주주의 실종

-- 국회(20-3) 국정감사 중간성적은 **C** 학점 --

- 올해 피감기관 753개로 20년 전(1999년 35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전(183일) 보다 오히려 줄었다.
 -- 국방위는 휴일(6일)과 감사준비(2일)와 현장시찰(6일)빼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
 -- 문광위는 휴일(6일)과 준비준비(4일)와 현장시찰(3일)빼면, 20일 국감 중 7일 감사
- 국정감사 적폐<1.의원-준비부족 2.정부-시정안해> 시정없는 국감은 국회의 무책임.**
 -- 농해수위의 농협국감, 5개 자회사 통합 질의. 6년 동안 시정 안돼 (이양수 의원)
 -- 보건복지위의 국감, 19대 국회때 질의, 아직 시정안돼 ‘국감 뭐하러’ (이명수 위원장)
 -- 법사위의 법원 국감, SAT사건 4년 연속 시정촉구에 위증/책임회피 (박지원 의원)
 -- 국토위의 70~80%가 지난해 질의와 같은 질의, 기관장의 결단 촉구 (윤관석 의원)
 -- 국감자료 거부/지체/변명 등으로 감사시간만 적당히 넘기려는 피감기관-국민분노
- 국방위, 32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 - 12시간 국감중 한번도 질문 못받은 기관이 29개**
 -- 하루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은 375개로 전체 피감기관 753개의 49.8%나
- 외통위 해외국감은 해외여행-외유성 국감이란 비난?**
 -- 올해도 12시간 30분 비행기 타고 가서 국정감사는 고작 2시간(영국)-해외공관감사
- 여당은 정부의 부실(무능과 부패)이 ‘정권의 독’ 입을 자각하고 감싸기를 중단해야.**
 헌법(46조2항)과 국회법(114조의2)대로, 소속당론에 기속 말고 양심따라 의정활동해야

1.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20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국회(20-3)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하여(10월 19일(금)까지) 절반의 국감을 평가합니다. <<정밀 종합평가는 국감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초 발표예정임>>
2.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 지 31년째 국정감사인 올 국정감사의 전반을 ‘C’ 학점으로 평가합니다.
- (1)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 를 내세웠으나,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피감기관장이나 정책의 난맥상을 감싸기,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 정권 심판’ 등을 내세웠으

나, 피감기관장의 허위답변 등에 사실상 무방책이어서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바른 국감’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이나, 노회찬 의원 사망이후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은 거대한 흐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2) 게다가 피감기관이 과다해서 지난해 국정감사(701개) 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의 753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으면서도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만 국감을 하면서도 밥샘 국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고, 태부족한 시간을 감정싸움하듯 정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자료가 국감부활 31년동안 전무하여 과연 국정감사 기관 선정과 일반인 증인신문제도가 필요한지와 성과를 알 수 없음》
- (3)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 만 하고, 국회는 시정조치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봉어빵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 (4) 여·야 정책, 이념문제가 아닌, 국가(정부)의 존재이유, 정의와 양심의 문제로서. 서울시의 일자리 나눠먹기 의혹에 분노하고, ①행안위의 경찰청, 서울시경 국감에서 동영상이 방영되며 탄핵반대 집회장소에서 4명의 시민이 죽고 72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종결을 했다는 경찰의 답변/ ②과방위의 KBS 국감에서 직원의 60%가 역대연봉인데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 없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허용 요구, 보복성 인사, 왜곡 편파방송을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 ③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못살겠다면서 시위를 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음에도 발뺌을 하거나/ ④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언제쯤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회피/ ⑤ 대법원 국감에서는 잘못된 기소로 5년째 1심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 4년째 연속 지적을 받았으나 잘못된 재판인줄 알면서도 법과 원칙, 절차위반에 대한 지적에도 마치 개별 재판 관여처럼 묵살하며 ‘답변할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능멸하는 것이고 법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3.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감사위원인 국회의원 특히 여당의원은 “부실정부(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정권의 독이고,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당이 정부 감싸기 보다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적/시정케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여야를 넘어 지적되는 사항을 제대로 점검해야,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정당의 의사(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면 바꾼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국방 치안 민생 등)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기속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하라(국회법 114조의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

■ 국감 중간평가 주요목차 ■

I. 제20대 국회 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 절반 총평	3
■ 2018년도 국정감사의 절반 성적은 C 학점	
■ 2018년도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	
■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반쪽국감 파행	
■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아직 국민보다는 정당을 앞세운 듯	
■ 민간인 특히 기업인 국감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과제	
II. 시정조치의 엄격 점검으로 ‘붕어빵’ 국정감사의 적폐를 청산해야	12
(정권에게도 독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여야가 협력해 척결해야)	
● 농협, 6년 동안 지적해도 아직도 협의 중 (이양수 의원)	
● 제19대 국회때 지적했는데 아직도 같은 질의 답변중이라면서 (이명수 위원장)	
● 질의 70~80%가 지난해 지적한 것, 결단 촉구 (윤관석 의원)	
● 지난해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 안돼 (한정애 의원)	
● 4년 연속 지적했는데 아직도 조치 안돼 (박지원 의원)	
■ 붕어빵 국감 근절의 시작은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 국회가 수년째 ‘시정조치하라’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날조한 가짜증거로 유죄선고’ 하고,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잘못없다’고 공개적으로 감싸고 나서다가	
이제는 재판관련 사항이라고 답변회피로 직무유기	
III. 20년전 국감과 비교해 보니, 국감일수는 줄었고 피감기관은 2배 증가	21
■ 태부족한 국감일수 : 20년전 183일에서 168일로 줄어	
● 민간인 증인도 늘어 : 116명에서 173명으로	
■ 병풍국감, 하루에 32개 기관 감사, 답변기관은 3개 불과(국방위)	
VI.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3제	27
■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 혈세낭비·비효율	
■ 국정감사법대로 30일 국감을 시행하고, 현장시찰은 국감기간을 피해서 하라	
V. 화제(話題)로 풀어본 2018년도 국정감사	29
VI.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감 진행상 특징	36

I . 20대국회 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 절반 총평

피감기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대놓고 발뺌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과 여당의 감싸기,
질의의 70~80%가 지난해 했던 내용이 되풀이 되고 있는
붕어빵 국정감사는 과감히 척결하고 시정해야

1. 2018년도 국정감사의 절반 성적은 C 학점

국정감사는 5천만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가5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천한 민주정치외의 보루이며,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자리인데, 국민이 아닌 정당을 대신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해서 남은 국정감사기간 5천만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정책·민생국감을 전개하길 기대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절반의 국정감사는 지난해 ‘C-’ 보다 조금 상향해 금년(20-3) 중간평가는 ‘C’ 학점으로 잠정 평가한다.

긍정적인 평가점으로는 지난해보다 파행(횡수, 파행으로 지체된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등 국감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아졌으며, 국감 초반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점검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점으로 피감기관의 거짓 우롱답변에도 야당은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여당은 부실 정부를 감싸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여 국정감사의 기능을 퇴보시킨 점이다. 또한 국감 중간에 쉬는 날짜가 많아졌고, 시찰 또한 늘어났으며, 수감기관 또한 지난해 701개보다 늘어난 753개여서 실제 국감을 하는 날짜는 줄어들고 수감기관은 늘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2018년도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비인가 행정정보 공개 등이 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국감에서는 청와대·정부 업무추진비 지출의 불법성을 부각시킨 한국당과 심 의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간 공방이 계속되어 일시적인 파행 등이 벌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가 쟁점이 되었으며, 청와대발 강정마을 사면 논란도 쟁점이 되었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와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여야 공방이 펼쳐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가역적인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쳐 이슈화 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쟁점이 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 택지 정보 유출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와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눈에 띄어 소상공인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국회는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역대 가장 많은 피

감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작년보다 50여개가 증가한 753개 기관이며 현장시찰도 24회나 실시한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호통과 욕박지르기, 자리 뜨기, 상대방 의원에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 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미국과 같이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섯 다운(Shut Down)까지 할 수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인격모독이 아닌 ‘질타’, ‘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 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 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반쪽국감 파행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증인신청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의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자 집단퇴장을 하였다. 10월 18일 방송문화진흥원 국정감사 도중 한때 파행을 겪었다가 19일 오전 11시를 넘겨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올초 불거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를 두고 각당 간사들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증인 소환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다. 다만, 10월 19일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을 앞두고 다시 국감장으로 복귀한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지사 등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이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드 인사니,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었고 그로 인한 파행까지 겪었다.

5. 정당국가화 경향 지나쳐,

국민의 대표인지, 정당하수인인지? 위험한 행태 만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배했다.

(1) 지난해까지만 해도 야당역할(정권이 바뀌었으나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을 하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라는 국감 기조 아래 민생·개혁정당의 이미지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한

다는 입장이었으나, 노골적인 정부 감싸기가 도가 지나쳐 야당위원의 질의에 끼어들어 감사방해를 함은 물론, 자신의 질의시간에 피감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기까지 하여 눈총을 사기도 하였다.

(2)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 ‘고용쇼크’ , ‘인사 참사’ , ‘부동산 가격 폭등’ , ‘높은 실업률’ ,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 , ‘야당 탄압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를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파헤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였으나, 피감기관의 허위답변과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뻔뻔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정감사 덕분에 시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들에게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장을 정치 공세와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나친 ‘청와대 구하기’ 로 국감장을 ‘청와대 방탄장’ 으로 전략시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 2018. 10. 16】

(3) 바른미래당도 ‘바로잡는 국감’ 을 슬로건으로, 은행의 금리조작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하였고, 2주차에는 보수대연합론(11명 자유한국당행 보도 가짜뉴스 논란)까지 나왔다.

(4)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심상정 의원의 dbrain 관련 ‘백도어’ 가능성 제기, 이정미 대표의 라돈 생리대 문제 등 라돈 생활용품에 대해 언론에 조명되었다.

(5) 원내정당인 대한애국당(대표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탄핵반대시위 중에 4명 사망 등 76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확인지적하였고, 민중당(대표 김종훈)은 KT 회장의 재선임과정에 대해 조

명하였다.

7. 민간인 특히 기업인 국감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과제 :

31년간 국정감사를 하였지만 민간인 증인에 대한 효과분석조차 없어

기업인이나 민간인을 많이 증인 출석요구한 국정감사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민간인 증인신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가 직접 국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인을 불러 호통, 야단을 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8년도 과방위(위원장 노웅래)는 여야 합의로 10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대부분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감과 관련하여 민간인, 특히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감이 정부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본질을 벗어나 ‘기업감사 또는 길들이기의 장’이 되거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이용하여 이벤트로 전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인들을 불러 야단칠 게 아니라 국감의 취지와 법에 맞게 그 기업관련 국가기관을 감사하는게 옳다고 본다.

또한, 민간증인을 불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나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십년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에서 그런 연구나 효과 분석 자체가 없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8. 정부는 지적을 받지만 정책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가 야단을 맞는 무대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정

을 국민께 가장 균형있고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 라고 하였듯이, 발뺌이나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가 아닌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정확한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은 10월 19일 2일차 기획경제 위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의 “언제쯤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지겠나? 언제쯤 일자리가 많아지겠나?” 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고 답변하여 큰 실망감을 자아냈다.

◆ 국민이 분노하는 국정감사 장면들 ◆

○ 경제부총리가 ‘언제쯤 좋아질지’ 경제전망 답변도 못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는 이틀(10. 18~19)동안 문제인 정부의 조세정책, 경제정책을 점검하였는데, 19일 감사종료 마지막 4분정도를 남겨 놓고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가 ‘언제쯤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언제쯤 일자리가 많아질 것인가’ 에 대해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답변회피를 하는 장면

추경호 의원 : 제가 숫자를 말씀드려주고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우니까 언제쯤 되면 좀 더 나아질까 그 부분하고, 일자리, 고용은 또 언제쯤 되면 좀 더 지금보다 개선이 될까 이걸 많이 궁금해 할 거 같아서, 그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제쯤 되면 조금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 그게 뭐 언제 좋아지고 하는 것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제 말에 거기에 대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 드리고. 다만 고용문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좀 더 시간을 주시죠. 저에게.
 추경호 의원 :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기간방송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편파·왜곡 방송 의혹 장면

KBS와 EBS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정무렵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지난해 KBS 직원 4596명 중 2759명(60%)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았다는 ‘연봉지급 현황’ 자료도 공개되면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직원 절반 이상에게 역대 연봉을 지급하면서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였고, 또 국가기간방송이 생존자가 있는 천안함 사건에서 생존자의 인터뷰없이 일방적 보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고통부담은커녕 공정하고 정확한 알권리를 훼손하고 왜곡·편파의혹이 있는 방송을 국민의 수신료로 내보내고 있다는 지적을 당하는 장면

○ 서울한복판에서 대낮에 4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당했다는데, 이미 수사종결되었다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탄핵반대집회 당시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아는지 물었을 때, 경찰청장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서울시경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이 나와서 그날의 동영상이 나오면서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울면서 증언을 하였는데, 대낮에 대창으로 찢려 피가 흐르는 무서운 장면이 공개되었음에도 이주민 서울시경찰청장이 수사종결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법치국가임을 의심케 하는 장면

○ 최저임금 인상 고통 호소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16개 부처가 집중 실태조사...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홍일표)는 중소기업부 국정감사는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라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전달되었는데, 주무부서인 중기부는 지난 5월 16개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실태조사에 동원된 정부부처로는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었으며,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의 상태와 최근 총회 개최 실적 등 활동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것이 명확한데도, 홍종학 장관이 발뺌하는 듯한 장면

○ 재판의 절차적 잘못이 명백함에도 답변 회피

10월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가짜 증거로 재판을 하고, 5년이상 재판을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해 재판을 하고, 공소장 접수 즉시 공소기각을 했어야 할 사건을 가지고 6년동안 재판을 하는 것에 지적하자, 재판은 신속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동문서답 하다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별 사건의 재판관련사항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엄연히 법에는 형식재판 우선원칙에 따라 5년 전에 공소기각했어야 할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되었는데 2년 반을 재판없이 끌다가 검찰의 날조된 증거제출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국감증인으로서 위증·변명·답변회피하였다. 또한 1심은 6개월안에 종결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음에도 그 담당 재판부가 아무런 제제도 안받는다면 법원행정처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임.

피감기관장은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고, 충분히 알고 있는 바탕 위에서 질의 의원과 국민이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배석한 직원들의 쪽지에 의존하는 피감기관의 장은 신뢰를 받기 어렵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 국정감사(20-3)의 잘한점 · 못한점 요약

긍정평가 요소	실망스러운 요소
1. 고용세습 문제, 유치원비리,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집중부각,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남북관계의 속도조절,	1. ‘병풍(屏風)’ 국정감사 지속 피감기관수가 지난해(701개) 보다도 많은 753개 기관이었고, 하루 10개이상 국정감

<p>문재인 케어 등 새정부의 복지 의료정책과 조세·재정, 탈원전대책, 주택가격 폭등 주택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p>	<p>사를 하는 피감기관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375곳, 피감기관이 한마디 질의도 받지 못하는 소위 ‘들러리’ ‘병풍(屏風)’ 등 피감기관이 다수</p>
<p>2. 지난해보다 외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1차년도(보이콧 일주일)와 2차년도(1회 미 실시) 등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직 미 실시된 국정감사가 한 곳도 없으며, 일부에서는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p>	<p>2. 청와대의 발언, 피감기관장 패싱, 감사위원 패싱, 피감기관의 답변 적절성 여부 등으로 파행되고, 감사 외적인 요소로 감정싸움 식의 가다 서다가 하는 등의 감사 파행 여전</p>
<p>3. 스타탄생의 한 방은 없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국정감사다운 감사를 펼치려고 수고하는 의원들이 있는 점과 여다의원이지만 정부의 잘못을 감싸기 보다 시정촉구하는 국감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의원들도 있었음</p>	<p>3.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등 유럽 순방,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회담, 문희상 국회의장의 12일간 터키와 루마니아, 스위스의 공식 방문(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 문구를 끌어내는 성과) 등에 동행한 의원이 국정감사를 못한 점과 관심분산으로 국정감사 집중도 저하</p>
<p>*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의 30일 국감은 올해도 실시하지 못하였고, 현장시찰은 국감 전후에 하라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도 국방위는 현장점검,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로 여전히 전시성 예산·시간낭비·비효율 감사를 계속하는 점도 실망스러움</p>	

II. 시정조치 점검으로 ‘붕어빵’ 국정감사의 적폐를 청산해야

(정권에게도 독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여야가 협력해 척결해야)

1. 국정감사의 본래적 참 의미를 찾아야

(1)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원구성이나 사보임으로 변동되더라도, 국회가 시정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집요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는 개정하고, 예산낭비 요인은 척결해 나가는것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은 분명 아님에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지난해 지적된 것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까지 피감기관이 시정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1987년 민주항쟁으로 부활하여 1988년부터 다시 시작된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하게 만드는 적폐이다.

(3)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4년과, 제19대 국회까지 이어지면서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붕어빵 국정감사”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나, 제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더욱 국회가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시정조치요구한 사항조차도 제대로 시정조치 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허위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들이 늘고 있었다.

참고로, 18대 국회 이후 6년간(2008~2013년) 국감 시정조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정조치건수 5767건 중 630건(11%)이 중복 붕어빵 시정조치로 나타났다.

2.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조치 점검 모습

(1) 6년 동안 지적해도 아직도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0월 1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의원은 2012년 농협 신경분리정책에 의해 유통회사 5개를 2015년까지 통합계획을 세웠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6년 동안 해마다 질의를 하였는데 올해도 또 질의를 한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 제19대 국회때 지적했는데 아직도 같은 질의 답변중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18일 노인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위원장은 장정숙, 김상희, 윤소이, 최도자 의원의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발언을 통해 “제가 19대(국회) 복지(위원)으로 앉아 있을 때 한

답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감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라면서 도
돌이표 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 질의 70~80%가 지난해 지적한 것, 결단 촉구

국토교통위원회의 10월 18일 한국감정원 등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 말미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거의 반복
되는 확률이 한 7~80% 된다면서 시정조치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
지라고 촉구하였다.

(4) 매년 지적하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어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의 10월 19일 한정애 의원은 서울고용노동
청 등 7개 노동청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도 산업안전관리비 일부 접대비용
쓰고,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저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것 아닙
니까?” 라면서, 고용노동부(박화진 실장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매년 지적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달
라면서 질의를 하였다.

(5) 4년 연속 지적했는데 아직도 조치 안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10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SAT 시험 문제 유출 재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사법공조 회신문
이 조작되는 등 문제점을 4년째 지적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파악해 보겠다
는 답변만 하는 사이 24명의 관련자들이 회유 등을 통해 벌금형을 수용하
고 1명만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 이라며 “사법부가 금년 1월 피
고인 인정 신문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면 5년을 끌어 온
재판을 마무리 해야지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 비
판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
칙” 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 재판관련 사항

은 답할 수 없다고, 무책임 직무유기 답변했다)

3. 붕어빵 국감 근절은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필요

(1) 국감의 단골메뉴인 ‘채용비리’ 역시 2016년 국정감사에 지적되고 시정조치된 요구사항이나 시정은커녕 오히려 ‘고용세습’으로 진화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6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산업통상부 주요감사 내용 중의 하나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고 되어 있다(결과보고서 9페이지). 또한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3번째 요구사항이다.(동 보고서, 112페이지)

2017년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여러 위원회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속속 불거졌다.

올해는 정무위원장 보좌진의 특혜채용이 불거져 상임위 국감이 파행을 초래하는 등이 빚어졌으며, ‘고용세습’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조직적인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시정조치 되었는가를 확실히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또 나올 것이 확실하다.

(2) 시정조치사항만 제대로 점검했어도 심재철의원등의 사건은 없었을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생리대 등 라돈방출 생활용품의 안정성 문제가 조

명되고 있다. 지난해 생리대 안정성 문제에 이어 진화한 것이다. 안전인증 관리기준(해썹)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여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감사(2008년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국감에서는 멜라민 식품(김치)에 대해 관계 당국의 늦장 대처에 대해 장관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첫날 국감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에서 늦장 대처했다” 는 것을 시인했고, 전 장관은 “9월 11일 언론 보도가 났을 때 바로 수거 검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식약청이 중국에서 확인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7일 수거 검사에 들어간 것은 늦장 대처” 라고 말했다. 또 “품목이 많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판매 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조치였음에도 늦어졌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가 늦었음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정권이 바뀐 현 국정감사에서도 품목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만 더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원 비인가 자료 유출의혹도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만 제대로 이행했으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인데, 피감기관은 “예 알겠습니다” 만하고, 국회는 결과보고서에 시정조치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도 질의응답(2016년10월6일, 한국재정정보원 등 국정감사)》

질의의원	질의내용(요지)	답변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추경호	그런 상황에서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킹 이런 데 대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과 끊임 없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어떠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는 해 놓는데 막상 일 터지면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의원	질의내용(요지)	답변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원식)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이곳은 안 된다, 다른 곳은 설사 될지 몰라도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교일	지금 보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영	저는 재정정보원이 굉장히 잘 출범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정보를 총망라해서 공개를 하는데, 가끔 해킹이 들어오지요?	예,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누가 주로 해킹을 한다고 보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구인지 아이덴티티가 안 되는 거지요?	위낙 다양한 측면에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 2018년도 국정감사(10. 16.화)에서 추경호 의원도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독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독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스템 개발·관리 관련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4. 시정조치가 거듭되고 있는 법사위 SAT 사건

국회가 수년째 ‘시정조치하라’ 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날조된 가짜 증거로 유죄선고’ 하고,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잘못없다’ 고 공개적으로 감싸고 나서다가 이제는 재판관련 사항이라고 답변회피, 직무유기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에 판사가 가짜 증거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감사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라” 고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2017.1.20.)을 거쳐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감사 조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 는 요구에 대한 회신이 아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동문서답의 보고로 국회를 우롱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로 지적을 받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은 사법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질타와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나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

진을 하여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회를 무시하며, 무력화시켰다.

국회 본회의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대법원의 답변내용(6개월 지난 뒤에 등재함)
<p>『장기간 심리가 지연된 후 재개된 ‘SAT 문제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과 관련하여 가짜 원본을 근거로 선고가 내려지는 등 의혹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재판사무감사 등 합당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 (2017. 1. 20. 국회 시정처리요구)</p>	<p>『향후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의혹 제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2017.2.,71면) ※ 재판사무감사 실시여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는채, “향후 잘하겠습니다” 고 위증함</p>

지난해에는 엉터리 답변서로 국감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얼버무리면서, “SAT재판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 는 듯이 100% 팩트와 다른 거짓 답변을 하였고, 올해에는 개별 사건인 것처럼 ‘재판 중이라’ 며 답변을 회피하여 잘못의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5. 국정감사의 시작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시정처리결과보고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정부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결과보고서에 의한 시정조치사항이 만들어져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각 부처로 내려가게 되며, 부처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정감사 2개월전에 국회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시정조치사항에 어느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인지가 적혀있지 않아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정부가 보고한 시정조치사항은 허위 보고가 되기가 십상이다. 국회는 올해부터라도 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같이 기재하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실시하여 최소한 질의한 의원이라

도 챙길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담당을 정하여 꼼꼼히 챙겨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제20대 국회의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현황》

상임위원회	2016년도	2017년도	증감
국회운영	45	58	▲
법제사법	190	217	▲
정무	338	457	▲
기획재정	116	116	-
외교통일	597	476	▽
국방	200	290	▲
행정안전	175	15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71	61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595	579	▽
보건복지위원회	1,241	1,193	▲
환경노동위원회	538	530	▽
국토교통	554	648	▲
여성가족위원회	126	133	▲
교육문화체육관광	2,2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428	-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매년 늘고 있고, 정부의 결과조치 결과보고서도 대체로 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백화점식 정책질의를 하면서 질의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요구사항도 많아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정조치처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실효성없는 추상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많았다.

《실질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피성 결과보고서》

위원회(연도)	시정처리요구사항	답변기관	시정처리결과
법제사법 (2016)	장기간 심리가 지연된 후 재개된 ‘SAT 문제유출 사건’ (서울중앙법원)재판과 관련하여 가짜 원본을 근거로 선고	대법원	향후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의혹 제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

	가 내려지는 등 의혹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재판사무감사 등 합당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		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수산 (2017)	행정부전체예산규모에 비하여 농업분야 예산 규모가 미흡한 실정 이므로 농업분야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 립 축 산 식 품 부	‘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체 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농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수산(2017)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시 직원 차별과 위화감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농 협 경 제 주 지 회사	<시정 처리결과> □ '17.5월부터 별도의 통합전담조직(유통혁신단)을 설치하여 유통자회사 통합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법인 간 직원 차별과 위화감 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수립 중이며, 원활한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양수 의원이 2012년계획당시부터 추진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
보건복지 (2017)	안전위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락·부실 대응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개선 할 것	식 품 의 약 품 안 전처	< 시정·처리 결과 > ○ 일상에서 많이 섭취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요인 분석 연구사업('18.2 ~) < 향후 추진 계획 > ○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취약분야 기준 규격 설정 등 관리('18.6 ~)
보건복지 (2017)	현재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질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보 건 복 지 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의료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 마련('17.11.) - 전향적 평가, 지역별·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 ○ '20년 전향적 평가 및 중소병원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4 월~)
보건복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	보 건 복	의료-한의료-정부 간 협의체에서

(2017)	처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기 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지부	한 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포함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 논의 중 - 환자 중심,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 모색
--------	---	----	---

Ⅲ. 20년전 국감과 비교해 보니,

국감일수는 줄고 피감기관은 2배 증가

1. 태부족한 국감일수 : 20년전 183일에서 168일(시찰포함)로 줄어

(1) 피감기관은 느는데 감사일수는 줄어

20년 전인 1999년에 피감기관은 352개 기관이었으나,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53개로 무려 401개 기관이나 늘어 났고, 지난해에도 701개나 되었는데, 그 보다 52개 많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국정감사 일수는 총 183일에서 총 168일로 감사일수가 줄었으며, 1999년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여 위원회별 평균 감사일수는 9.89일로, 1999년의 11.44일보다도 많이 줄어 들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실제 감사일수》

위원회 (현원)	위원장 (소속정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순)	국감 기간	토일 휴일	준비 휴일	현장 시찰	실제 감사일수
국회운영(28)	홍영표(민)	서영교 윤재옥 유의동	2	0	0	0	2
법제사법(18)	여상규(한)	송기현 김도읍 오신환	20	6	2	0.5	11.5
정무(24)	민병두(민)	정재호 김종석 유의동	20	6	3	1.5	9.5
기획재정(26)	정성호(민)	김정우 추경호 김성식	20	6	3	1	10
교육(15)	이찬열(미래)	조승래 김한표 임재훈	20	6	5	1	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21)	노웅래(민)	김성수 정용기 신용현	20	6	2	2	10
외교통일(23)	강석호(한)	이수혁 정양석 정병국	20	2	1	1	-
국방(17)	안규백(민)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20	6	2	5	7

행정안전(21)	인재근(민)	홍익표 이채익 권은희	20	6	3	0	11
문화체육관광(17)	안민석(민)	손혜원 박인숙 이동섭	20	6	4	3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19)	황주홍(평)	박완주 경대수 정운천	20	6	2	0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29)	홍일표(한)	홍의락 이종배 이언주	20	6	2	2	10
보건복지(22)	이명수(한)	기동민 김명연 최도자	20	6	3	1	10
환경노동(16)	김학용(한)	한정애 임이자 김동철	20	6	3	1	10
국토교통(30)	박순자(한)	윤관석 박덕흠 이혜훈	20	6	4	1.5	8.5
정보(11)	이학재(미래)	김민기 이은재 김과녕	6	2	1	0.5	2.5
여성가족(17)	전혜숙(민)	정춘숙 송희경 김수민	2	0	0	1	1
검입위 포함 <<총계>>			290	82	40	22 (Hits 24회)	130

* 주의: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4일, 해외에서 5-6일 실시하고 있음
(실제감사일수 제외함)

(2) 사진 뿐인 현장시찰도 역대 국회의 국정감사마다 다소 증감있으나 20년 전보다 6회 늘어나

현장시찰 횟수 역시 1999년에는 18회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2018년에는 24회로 지난 해(2017)보다 27회보다는 줄어들었으나, 1999년보다 6회나 증가하였다.

현장을 살펴본다는 명목으로 현장시찰을 하고 있으나, 민간인 증인까지 불러서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감사시간을 현장시찰에 할애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시찰은 국감기간을 피해서 해야>>

n (3) 민간인 증인도 늘어 : 116명에서 173명으로

1999년 민간인 증인 116명과 참고인 161명이었다. 올해 통계는 아직 없으나, 지난 2017년도 민간인 증인은 173명으로 1999년 보다 57명이 늘었으며, 참고인 역시 223명으로 62명이나 늘었다.

《20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갯수	총 감사 일수	대상기 관 (실시)	현장 시찰 횟수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대선	김대중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99 (296)	17	180	510	40
	대선	노무현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대선	문재인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 (계획)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2. 병풍국감, 하루에 32개 기관 감사, 답변기관은 3개 불과(국방위)

(1) 20년 전에는 하루에 평균 2개 기관꼴로 감사하였는데,

올해는 평균 5.56개 기관(외교통일위 제외)을 하루에 감사

20대 국회 10개 이상 기관을 하루에 국정감사는 경우는 168일 중에서 24일이었다.

재외공관 국감을 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하면, 실제감사일수 130일 동안 723개 기관을 감사하니, 하루에 평균 5.5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는 하루에 평균 2개 기관을 감사하였으나, 피감기관은 늘고, 감사일수는 줄어서 동시 수감기관이 많아진 것이다.

10개 이상 기관을 하루에 감사하는 경우가 법사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경우 12일 감사일 중에서 4일이나 되었으며,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도 12일 중 3일이나 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의 경우에는 68개 기관을 11일 동안 국정감사하는 데 하루에 10개 이상인 경우가 4일이나 되었다.

(2) 1999년 하루에 8개 이상 국정감사 2일(정무위) 밖에 없었으나,

2018년엔 전체 피감기관의 50%가 하루 10개 이상 무더기 수감

국정감사 통계 자료집을 살펴보면, 1999년에는 8개 이상 하루에 감사하는 경우는 정무위원회가 유일하였으며, 횟수는 2일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올해에는 10개 이상 동시감사를 하는 경우가 24일이나 되었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9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에 10개 이상 동시 병합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지연시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처럼 “중요하지 않은 피감기관”이 없는 바, 피감

기관수와 감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10개 이상 동시 수감 현황》

위원회	횟수	10개 이상 동시 감사 기관수	전체감사일수	위원회 전체대상기관수
법제사법	4	56	12	73
교육위	2	33	9	6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	63	12	80
국방	3	54	12	66
행정안전	1	12	11	37
문화체육관광	3	48	10	81
산자중기	3	36	12	61
보건복지	1	12	11	37
환경노동	4	61	11	68
계	24	375	168	753

(3) 다수기관 동시 국정감사는 업무보고 외에

답변없는 경우 84개 기관

법률소비자연맹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회에 올라온 영상회의록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2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중 무려 84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해 한 번도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 국정감사 2개 기관 이상 동시수감 미답변 기관 현황》

(2018. 10.10~10.16: 조사일 2018.10.17.)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미답변 기관현황	미답변 기관수
문화체육관광	10.10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기관	국립국악중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국어원,국립중앙극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원사무국	8
법제사법	10.10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6개 기관	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3
산업자원중기벤처	10.10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 등 7개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3
국토	10.10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미답변 기관현황	미답변 기관수
국방	10.10	국방부 등 32개기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9
환노	10.11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	10.11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문화진흥(주), 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7
외교통일	10.11	통일부 등 4개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교육위	10.11	교육부 등 7개기관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4
과방위	10.11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법사위	10.12	법무부 등 5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3
환노위	10.12	기상청 등 16개 기관	수치모델링센터,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PEC기후센터,	11
문체위	10.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복지위	10.15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등 6개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
산자중기위	10.16	한국전력공사 등 8개기관	한전KDN,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2
행안위	1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12개 기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
	계			84

《2017년도 국회 내 병합(동시)감사 중 질의 받지 못한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동시수감기관수	질의를 받지 못한 대상기관
10월 13일(금)	외 교통 일 위 원 회	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일자	위원회	동시수감기관 수	질의를 받지 못한 대상기관
10월 16일(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교육문화체육위원회	8	국립무형유산원 (대행체제임)
10월 17일(화)	보건복지위원회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지원센터
	환경노동위원회	14	국립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APEC기후센터 수도권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10월 18일(수)	환경노동위원회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10월 19일(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정동극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아시아문화원 국립현대무용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진흥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정보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VI.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개선 제안 3제

1.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시정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질의를 막으려면,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이 절실하다.

- ① 상임위 차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 ②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 ③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표시)

2.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할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하므로, ①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중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 그 대신 자료요구 철회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 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3개반을 꾸려서 해외국정감사를 나갔는데, 첫 날만 파악해 보면, 미주반을 보면 인천공항에서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까지 비행기시간만 13시간 50분 걸리는데,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시간 35분 밖에 하지 않았다.

첫날 아주반의 경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인천공항에서 7시간 10분 걸리는데,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아세안대사관에 대한 감사시간은 2시간 43분에 불과했고, 감사위원 8명중 3분이 결석(추미애 의원(청가)과, 이해찬 의원, 윤상현 의원은 결석)하였다.

구주반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영국 런던까지는 최소 12시간 30분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데 주영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시간은 고작 2시간 04분이었고, 5명이 참석하였고, 민주당 진영 의원은 결석하였다.

이처럼 비행기타는 시간이 감사기간보다 훨씬 많은데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면서 이러한 원시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예산낭비나 부정부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의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

3. 법대로 30일 국감을 실시하고, 민간인 증인신문기일을 별도로 하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 법을 준수하면서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시찰 및 증인신문기일을 운영하여 시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화제(話題)로 본 2018년도 국정감사*1)

1. ‘들러리’에서 ‘주목받는 기관’으로 변신한 피감기관

(1)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도에는 위원장(당시 위원장 홍영표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려성 질의에 대해 답변기회를 얻은 것에 반하여 지난해와 올해에는 들러리 피감기관이 아닌 주역 피감기관화되었다.

[2016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의 배려성 질의]

- 위원장 홍영표 오늘 첫 질의이지요,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장 박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2016년도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특히 올해 10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강박하였고, 여야당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으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이 보통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2) 한국재정정보원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30여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심재철 의원에게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병원·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을 향해 “감사에서 빠지라”며 공세를 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해놓고,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즉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놔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며 여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3) 통계청

기관 합동이 아닌 사상 첫 단독으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는 강신욱 통계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위한 코드 인사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특히, 야당은 2분기 가계동향 통계 직후 통계청장이 교체된 배경을 집중 공격했다. 일자리와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자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위해 현재의 강 청장으로 급히 교체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통계청장 교체는 차관급 교체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였다.

강 청장 역시 코드인사 주장의 한 근거인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때 작성한 가계동향 분석 보고서는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코드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2. 이번 국감쟁점 등을 나타내는 국감 소품

(1) 어처구니 없는 멧돌 (가짜뉴스 대책 관련)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감장에 손잡이가 없는 멧돌을 들고 나와 시선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 뉴스’ 차단 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멧돌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는 멧돌을 들고 나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누리꾼 사이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소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 퓨마 닮은 뺨갈 고양이 (동물권)

국감 첫날이었던 10월 10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세종시 국무총리실 등 국정감사장으로 공수해온 ‘뺨갈 고양이’가 감사장에 등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를 언급하며 동물 관리체계와 사후처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 위해 퓨마 대신 비슷한 외형의 ‘뺨갈 고양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린 고양이를 장시간 철장에 가둔 채 국감장에 방치한 것을 놓고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이 직접 SNS에 사진을 올려 고양이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3) 배터리문제 K11소총 (자주국방의 현주소 관련)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K11은 배터리가 없으면 못 쏜다. 배터리 하나 용량은 8시간밖에 안 된다. 응급으로 한 사람당 11개씩 지급을 하는데 전쟁 나면 이 총은 나홀이면 더는 못 쏜다”고 주장했다.

3. 언론에 뜬 국정감사장의 민간인

(1) 백종원 대표이사 (골목상권 대책)

백종원 대표는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백종원 대표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해 18만명 이상 요식업을 시작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90% 이상이 폐업을 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선부르게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진 만큼,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을 막자는 주장을 전개했다.

특히 백종원은 “신고만 하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 너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종원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 선동열 감독 (야구선수 선발 관련)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지난 10일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손혜원 의원은 선 감독에게 주제와 거리가 먼 연봉, 계약조건 등을 질문하면서 “전임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선수 선발 기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시즌 성적을 제시하는 등 ‘막무가내 지적’ 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3) 유은정 대한항공 승무원 (근로복지 관련)

유은정 대한항공 승무원이 10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어려운 근무환경을 설명하였다.

4. 곤욕을 치른 피감기관의 장

(1) 유은혜 교육부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장에 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11일 교육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정감사는 시작된 지 5분도 되지 않아 중지됐는데 유 장관의 증인선서 직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때문이다.

곽 의원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11건의 의혹 중 공소시효 마감, 자료제출하지 않아 밝히지 못한 의혹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는 경매 입찰방해, 수뢰후 부정처사에 해당하고 기자간담회 허위신고는 정치자금법, 우석대 조교수 허위 경력 기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고, 일시 파행까지 겪었으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질문 패싱을 당하였다.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월 15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의 증인 요청으로 출석한 유 심판관리관이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압박을 받은 점을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 참이었지만, 해명 청취를 놓고 여야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정부측 답변 있어야하니 간단한 답변 기회를 줘야 하며 기회 공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역시 “특정 직무정지된 국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라며 “답변을 듣지 않으면 진행 상 옳지 않다”고 민 위원장을 거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병두 위원장이 감사중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정위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박상기 법무부장관

현직 장관의 말 한마디가 구설을 빚기도 하였다. 10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사과없이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1일 결핵 등 대북 의료지원과 관련해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가발언에서 “미국에서 막고 있다는 것은 의료지원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막고 있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속기록에서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월 12일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여 위원장 요구에 “답변을 준비해 주질의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과 관련해 사전에 박 장관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말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소신 있는 의견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지속한들 무슨 의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같은 당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떠났다. 여 위원장도 결국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점심시간에 내용을 파악해 오후 감사가 속개하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달라”며 박 장관에게 주문한 뒤 낮 12시30분께 정회했다.

5. 인기(관심)를 모은 국정감사장

(1) 질의보단 웃으로 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일 ‘한복 국감’ 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인기를 모았다. 안민석 문체위원장(민주당)제안으로 이뤄졌다. 안 위원장은 전날 “다음날 문화재청 국감이니 드레스코드를 신경써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안 위원장은 한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나왔다. 안 위원장은 “약탈 문화재 환수 협상 때 입었던 두루마기를 입으려다 못 했다”며 “우리나라의 귀한 전통 의상을 입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태권도 공인 9단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나왔다. 태권도를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명시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며 태권도의 올림픽 공식종목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백종원 대표가 등장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대책)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에서 더본

코리아 사업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 더본 코리아 외에 더본 아메리카, 더본 차이나 등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또 올리브TV '한식대첩',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해박한 음식 정보를 전하고 있다. 백종원 대표는 “중소기업을 빠져나갔다”는 지적에 “저희가 빠져나가려고 나간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라고 웃으며 답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두고 3년 평균 매출액이 이를 넘으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 등도 박탈된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이유에 대해서는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려는 게 아니고 준비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오픈한 분들은 고쳐가면서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3) 김성태 원내대표 수난 행정안전위원회(고용세습논란)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방문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고 시청 방문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진행은 파행되고 지연되어, 서울시경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겼다.

V.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감 진행상의 특징

1. 기관장의 교체로 취임 하루 후 국정감사 등

“내각 선수교체를 통해 국정감사를 제아무리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히기도 하였는 데,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 국정감사 직전 기관장의 교체로 인해 피감기관의 장이 취임 후 하루 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

합참의장은 취임 하루 만에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경우에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감사장에서 ‘패싱’ 논란 등 화제가 집중되었다.

실제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역시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서 섰지만 실무통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이다.

2. 국정감사 중 문화체육관광위는 금요일마다 시찰(불금 시찰)

2016년 21회 보다는 늘고 2017년도 28회보다는 준 24회(오전 오후 장소 구분) 현장시찰이 계획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회와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금요일마다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고 마지막 주(10.25.)에는 목요일에 현장시찰을 하고, 금요일에는 자료를 정리를 하여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관광’ 위원회처럼 비쳐졌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 속에 치루어지는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경우에도 독립기념관 시찰후 하루 자료정리 시간을 가져 이틀동안 공백을 가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점검) 횟수(계획) 비교》

위원회명 (2018년도 위원장)	2016년도 국정감사	2017년도 국정감사	2018년도
국회운영위원회(홍영표)	0	0	0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0	0	1
정무위원회(민병두)	1(감사중)	2	1

위원회명 (2018년도 위원장)	2016년도 국정감사	2017년도 국정감사	2018년도
기획재정위원회(정성호)	2(감사중)	1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노응래)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기술정보통신)	1	2	2
교육위원회(이찬열) (2016년도, 17년 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민석)			3
외교통일위원회(강석호)	1	0	1
국방위원회(안규백)	5	7	6
행정안전위원회(인재근)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1(감사 중)	1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1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홍일표)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2	2
보건복지위원회(이명수)	2	3	1
환경노동위원회(김학용)	2	1	1
국토교통위원회(박순자)	0	6(감사 중)	1
여성가족위원회(전혜숙)	1	1	1
정보위원회(이학재)	1	1	1
계	21	28	24

※ 감사 중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끝난 후 시찰을 하는 경우로 가뜩이나 시간이 촉박함에도 이렇게 별건 대낮에 국정감사(이번 국토교통위의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음

3. 23시 이후 자정을 넘긴 심야국감은 15회로 지난 해(6회) 보다 늘어

2017년도 국정감사 전반 일정 69일(시찰 미포함) 국정감사일정 중 6일에 불과했다. 6일 중 2일은 파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정감사가 늦게 끝난 경우이다.

2018년도에는 첫날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문제로 외교통일위원회가 23:00가 넘었으며, 지난해에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는 코리아 패싱 논란,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의 공과 등이 다루어

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자정을 넘겨서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도 23시를 넘겨 심야까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도 심야국감을 진행하여 총 15회 심야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밤 11시를 넘겨 진행된 2018년도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개회시	산회시
10월 10일 (수)	과학기술정보 방 송 통 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과천청사	10:06	24:16
	외 교 통 일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10:03	23:3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	국회	10:09	23:26
10월11일 (목)	교 육	교육부 등	국회	10:17	23:0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I (에너지)	국회	10:08	00:49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02	23:26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제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부세종청사	10:00	23:23
10월 15일 (월)	기 획 재 정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10:03	23:10
	교 육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회	10:06	23:28
	보 건 복 지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회	10:01	23:04
10월 16일 (화)	행 정 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2개 기관	국회	10:11	23:19
	기 획 재 정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	국회	10:10	23:10
10월 18일 (목)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세종시 기획재정부	10:06	23:22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개의회	산회시
	행정안전	서울시 서울시경철청	시청 /시경	10:06	00:17
10월 19일 (금)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 등	국회	10:12	23:47

《참고 2017년도 국정감사의 심야(밤 11시 이후) 국감현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장소	개의회	산회시
10월 12일 (목)	외교통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회	10:01	23:1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 (에너지)	국회	10:07	25:04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02	23:13
10월 13일 (금)	교육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부세종청사	11:30	24:40
	행정안전	경찰청	경찰청	10:04	23:14
10월 17일 (화)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국회	10:00	23:50

반면 저녁 6시 이전에 조기 국정감사가 종료된 경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유일하게 6시 이전에 종료하였고, 지방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의 1반 경상북도 국정감사와 2반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오후 현장 시찰로 별건 대낮에 종료하였다.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역시 오후 4시가 넘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현장 시찰을 하였다.

다만,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으로 인해 일찍 종료(국감을 하지 못함)하였고,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이후에 시찰이나 현장점검을 가기 위해서 일찍 종료하였는데, 다 저녁 때에 현장시찰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국정감사의 집중도만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여전하였다.

《2018년도 전반기 저녁 6시 이전에 끝난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개회시	산회시	비고
10월 12일 (금)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농촌진흥청 등 3 개기관	농촌진흥청	10:05	17:22	전주에서 실시
10월 16일 (화)	문화체육관광 국 토 교 통	문화재청 등 19 개 기관	국회	10:02	17:59	
		경상북도	경상북도	10:02	14:53	임청각 현장시찰
			충청북도	10:00	13:14	청주공항 현장시찰
10월18일 (목)	국 방	육군본부	계룡대	10:02	16:28	
10월 19일 (금)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국회	10:04	17:58	

《2017년도 전반기 저녁 6시 이전에 끝난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개회시	산회시	비고
10월 13일(금)	법 제 사 법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 판소	10:05	11:35	파행
	국 토 교 통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토 지주택 공사	10:12	16::51	시찰
10월 16일 (월)	행 정 안 전	소방청	119특 수구조 대	10:04	16:22	관람
10월 17일(화)	국 방	병무청	국회	10:03	12:37	시찰
10월 19일 (목)	환 경 노 동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영산강 유역 환경청	10:15	16:06	

10월 20일 (금)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회	10:02	17:51	
	국방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계룡대	-	12:50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대전	-	15:00경	시찰

4. 파행, 이유도 가지가지- 파행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치공방여전 위원장, 여·야당이 바뀌었지만 11년 연속파행 : 교육위원회

제20대 국회 3차년도에서는 교육위(위원장 이찬열)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로 나누어졌으나, 교육위원회가 국감 첫날(교육위는 10.11부터 시작)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논란으로 일시 파행을 겪어 11년 연속 파행의 기록을 하였다. 다만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파행을 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 첫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당시 위원장 유성엽)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편향성과 여론조사 발표의 문제로 야간에 설전을 벌이다가 심야인 22시 30분경에 파행하였고, 다음날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0시 개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하여 오전 11시 30분에야 개의를 하는 등 2차례 파행을 한 바 있다.

10월 12일 금요일에는 9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일시 파행을 겪었고, 오후에는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위원장 비서관의 취업 청탁의혹과 관련하여 파행을 하였으나 감사는 진행되었다.

10월 15일에도 국방위(위원장 안규백)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합참 비공개보고 유출과 관련하여 사과요구와 함께 일시 정회하였으며, 기획재정

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도 심재철 의원의 제척논란을 두고 연속 파행을 하기도 하였다.

10월 18일에는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정감사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시청 진입을 막은 이유로 파행하였다.

다만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소장권한대행 문제로 파행하여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실시되었다.

조금 긴 파행으로는 10월 18일 과방위(위원장 노응래)의 방문진 국감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저녁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전반 파행성 정회일지》

(국감 모니터위원 보고 기준)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	파행원인	결과
2018. 10.10. (수)	법제사법	대법원 등	대법원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관련 (대법원장이 춘천 지법원장 시절 공보관 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문제).	속개됨(김명수 대법원장은 산회직전 인사말)
2018.10.11. (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암세포 사진을 활용한 대형 현수막을 게시(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 비판용)	일시정회후 국감 진행
2018.10.12. (금)	법제사법위	법무부 등	법무부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	일시정회후 국감은 진행
2018.10.15. (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청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과의 접촉 혐의로 직무정지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후 공정위원장의 답변여부를 놓고)	일시 정회 후 속개
2018.10.15. (월)	기획재정	통계청	세종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 등 촉구	
2018.10.15. (월)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회	10. 12. 야당위원이 합참 비공개 보고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일시 정회후 속개(비공개 감사진행후 공개로 전환)
2018.10.16.	기획재정	재정정보원 등	국회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일시 정회후 속개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	파행원인	결과
(화)				배제 등 촉구	
2018.10.18. (목)	법제사법	서울고법 등	서울고법	강정마을사건 조정판사 참고인 출석 논란	민주당의원 퇴장, 일시 정회 후 속개
2018.10.18. (목)	행정안전	서울시	서울시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시청 방문을 시청경비인력에 의해 저지	일시 정회후 속개
2018.10. 18. (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회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다 결국 파행	야당 의원들의 국감 퇴장

《참고 2017년도 국정감사 전반 파행성 정회일지》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	파행원인	결과
2017. 10.12. (목)	교육문화체육관광	교육부	세종종합청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인적 구성의 편향성 및 여론조사 발표문제 지적	저녁 10시 30분 정회후 속개되지 않음
2017.10.13. (금)	법제사법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인사말 허용여부	국감을 하지 못한 채 끝남
	교육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	어제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조작의혹 관련 파행의 여파로 이어짐	오전 11시 36분경 국감 개시
	행정안전	경찰청	경찰청	오전 10시 50분경 경찰개혁위원회 녹취록 관련 자료제출 문제	점심식사후 오후 국정감사 정상화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회	15시경 세월호 최초보고문건조작 의혹 언급	17시 20분경에 속개됨
2017. 10. 16. (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촌진흥청 등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국감을 진행	일시적인 정회 후 속개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국감을 진행	일시적인 정회 후 속개됨
2017. 10. 17 (화)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회	기관증인에 세월호 관련 질의의 적합성(이용주의원이 이현 이사장에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박	일시적인 정회 후 속개됨

일자	위원회	대상 기관	장소	파행원인	결과
				근혜 전 대통령 최초 보고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한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질문)	
2017. 10. 19 (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 산하기관	국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원배 이사가 이날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대책회의를 함	오후 속개시간이 1시간정도 지연됨

5. 실시간 인터넷 의사중계 늘어남(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도 공개)

국회가 아닌 외부(피감기관, 해외공관 등)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에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보다 더 많이 공개되고, 실시간 방영되었다.(다만 서울고법, 고검 등은 녹화중계도 안함)

개별의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통해 알리는 것도 매우 신선하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에도 부합.

**2018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도자료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올려 놓았습니다.**